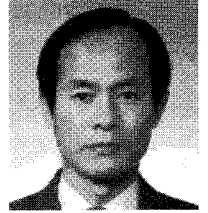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당면과제와 장애요인



정명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금 우리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매우 무겁고 막중하다.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지금의 우리 농업을 바라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농특위가 지금의 우리농업문제를 풀어 가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농업이 처해진 국제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농민들이 원하는 것과 농업정책의 방향이 합치될 수 있는 대안들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의 농업구조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어 이와 대응하는 새로운 세력그룹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무역협정기구인 GAAT를 통해 농업협상을 주도했고, 이제 WTO를 통해 세계 농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수출주도국들은 농산물의 수출입을 자유화하고 관세를 없애며 장기적으로는 세계농업생산과 유통구조를 기업중심으로 분업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적지적작의 원리를 내세운 생산의 분업화와 효율적인 물류 방식을 내세운 유통의 계열

화 등 비교우위론적 구조 재편 방식들은 이미 그들이 자국에서 그리고 남미의 약소국들에서 얻은 경험과 효과를 토대로 확신을 가지고 밀어 부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생산은 하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적지적작의 원리가 적용되고 그래서 주산지나 주산국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유통은 국제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 유통기업이나 곡물메이저들에게 독점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자나 생산조직까지도 유통망을 확보한 농산업 재벌에게 계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바나나의 경우, 세계의 바나나의 생산적지를 거의 지배하고 그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는 두 개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바나나 물동량의 60%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그들은 바나나의 생산적지를 점령했고, 유통구조를 재편해 놓았기 때문에 인류가 바나나를 먹는 한 영원한 기업으로 자리를 굳힌 셈이다. 농업산업은 타산업과는 다르게 생산의 적지와 유통망을 독점 수준으로 점령한 이상 누구에게도 도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농업의 생산구조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간다면 결국은 한 두개의 쌀 생산회사가 우리나라의 쌀 생산을 도맡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국제유통기업인 곡물메이저와 손잡아 이를 유통시키는 독과점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물론 축산이

나 타작물농업도 방향은 같으며 그렇게 될 경우 자영농민들의 설자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구조재편을 추구하고 있는 뉴라운드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계획되고 목표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세계농업구조 재편의 움직임에 대응한 EU(유럽연합)의 정책은 연합국가 형태를 띠면서 미국, 캐나다 등 농수산물 수출 강대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을 견제하고 농업생산과 유통구조의 재편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유럽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는 경제블록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기들의 농업생산정책의 방향을 증산이 아닌 생산기반(농지)유지정책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유럽블록내에서도 농업생산에 비중이 실려있는 프랑스나, 스페인, 네델란드 등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주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소위 블록내의 수출입 자유화 정책을 목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유럽연합을 추진하면서 미국농산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동료 국가들에게 유럽 블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동독과 미군 주둔 문제를 통일이라는 열쇠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독일은 농산물의 국내자급을 위한 증산 정책은 포기한 것이며, 다만 긴급시를 예상한 농지유지 정책만은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왔다. 그것은 농산물의 생산이 긴급한 경우는 언제든지 경작이 가능할 수 있게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고품질 소량생산의 방향을 추구하도록 한 것이다. 농지의 휴경이나 생산포기에 대한 보상과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혜택은 생산성이 있는 현재의 농지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도

록 한 것이다. 독일은 자국내의 농업은 증산보다는 품질위주의 농업을 지향하고 점진적으로 생산량은 줄이며, 지역적 역할분담을 통한 유럽연합의 결성이라는 전략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결과 독일은 현재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도 이루었고 농업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환경농업의 선진국으로 무농약 유기농산물생산기술이 크게 발전되었다.

또한 국가의 지존심을 지키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를 유지 보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농민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들이 농사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득 보장대책을 강구해왔다. 고품질 농업으로 지향한 농민들의 생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값으로 거래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활동의 범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과 저장, 유통을 농업으로 분류하고 이 분야에 기업이나 자본가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금지하여 농민들만이 할 수 있는 소득활동의 고유범위를 확보시켜준 것이다. 농산 품목별 소규모 조직과 지역연대의 중·대규모 조직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의 지원을 해온 것이다. 이제 독일의 농민들은 생산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거의 대부분에 농산물을 소비조합과 직거래하고 있으며 필요한 가공사업도 장악하여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농업정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부는 다른 국민들에게 농지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그것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활동의 범위를 늘려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그래서 모두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의 농업분야는 농민들의 고유한 소득활동의 범위로서 보호되는 것”을 합의하도



록 유도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독일의 농업정책과 전략적 정책방향의 설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독일의 경우와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큰 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이번의 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차대하다고 본다.

이에 관한 몇가지 제안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 농업협상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그리고 우리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한 테이블에 앉게 되는 뉴라운드 협상을 대비하여 정확한 대세판단과 현명한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농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유사시를 대비한 생산기반의 유지와 일정 수준의 기본식량 생산성의 보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농민유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나가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농업정책수단 등이 연구검토 되어야 하고 국민과 농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기획될 수 있어야 한다. 농민들에게는 소득보장 방법들을 도입·시행함으로써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국민들에게는 농업의 중요성과 그 역할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국가적 구조개혁 방안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부문의 구조개혁은 국민의 합의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정책과 농촌, 농민의 사회정책을 조화롭게 연계시키는 방법들은 농림정책당국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문화관광부등 관련정책당국과 손을 맞잡지 않고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끝으로 농특위의 위원구성은 어디까지나 범정부적이어야 하고 사업의 범위도 그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 농업문제를 농업이라는 생산정책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농촌과 농민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책과 국제관계라는 정치외교적 정책까지도 포괄적으로 연계시켜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제11회 대신농촌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분야시상인 대신농촌문화상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분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될 수상후보자를 찾고 있음.

- ◆ 시상부문 : 첨단농업기술진흥부문, 농업구조개선부문, 농촌교육·문화창달부문, 농업공직부문
- ◆ 시상 및 상금 : 각 부문별 3천만원(단, 농업공직부문은 개인 1천만원, 단체 2천만원)
- ◆ 접수기간 : 2월 1일~4월 30일
- ◆ 문의 : 본회 연수·지도부 (02)794-7270